

분뇨 마구 버리는 축사...허술한 방역 관리

돼지열병 비상 속 무안 축사 이동제한 어기고 인근 밭에 무단 살포 감염·악취에 바다 오염 우려 등...전남도, 불법행위 전수 조사 추진

자동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암모니아 냄새와 분뇨 악취가 진동했다. 차에서 내린 지 10여 분만에 두통이 올 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지난 30일 찾은 무안군 현경면 한 돼지 축산 농가 주변의 상황이다.

악취의 주범은 돼지축산 농가에서 무단으로 버린 분뇨였다.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따른 이동중지명령까지 어기고 인근 밭에 가축분뇨를 무단 반출해 살포한 것이다.

한 주민은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서 농을 정도"라면서 "수차례 항의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이런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속에 전남도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청 인근 돼지축산농가마저도 정부 지침을 어기고 분뇨를 무단 방출하고 있지만, 전혀 통제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에 따라 지난 17~19일과 지난 24~28일 2차례에 걸쳐 전국 가축과 축산 관계자 등의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살아있는 가축과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했으나, 전남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일 무안군 축산과의 GPS기록

등에 따르면 무안군 현경면 S축산의 분뇨 차량이 2차 이동중지명령 기간이었던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총 7차례 인근 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7시께에도 1차례 인근 밭으로 옮긴 기록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적재 능력이 8t 정도임을 감안하면 25일 오전에만 인근 밭에 뿌려진 가축 분뇨의 양은 50t 안팎으로 추정된다. 분뇨를 무단투기한 밭은 S축산 소유다.

인근 주민들은 이 농장이 25일과 27일은 물론 1차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간에도 인근 밭에 분뇨를 뿌리고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무안군 확인결과, 이 기간에 차량의 GPS는 켜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민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GPS 조작 그리고 가축 분뇨를 주변 밭에 뿌렸다

이처럼 전남도의 돼지분뇨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대 21일의 잠복기간이 있고, 잠복기간 동안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뚫고 바이러스가 하천 등을 통해 퍼져나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면서 "이제라도 가축 분뇨 시스템을 긴급 점검해 미비한 부분에



지난 28일 무안군 현경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인근 밭에 분뇨를 뿌린 뒤, 트랙터로 갈고 있다.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축산의 불법 분뇨 배출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는 물론 악취와 함께 정정해역인 무안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악취냄새 때문에

빨래조차 널 수 없다"면서 "무안이 낙지로 유명한 동네인데 이 앞바다로 돼지 분뇨가 흘러 내려 가면 누가 무안낙지를 찾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도내 양돈 농가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동물방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방역관계자는 "돼지 축산농가의 불법적인 행위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축산과 관계자는 "GPS자체를 끄고 차량을 운행한다면 차량의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며, 단기간 운행하면 적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축산농가들 사이에선 대부분의 돼지축산농가들에서 분뇨를 불법으로 방출해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축산 관계자는 "농장 주변에 있는 농장소유의 땅에 분뇨를 뿌린 것도 문제가 되느냐. 대부분의 농가에서도 이렇게 한다"면서 "특히 정부의 이동중지명령으로 분뇨 저장공간이 부족해 분뇨를 밭에 살포할 수밖에 없다. GPS를 끄고 차량을 운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무안=정병호·김민준 기자 jusbh@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개시 통보와 함께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3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시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통보 대상은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은 입건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과 27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청을,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정 부시장 등 관련 고위공무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원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유출됐고, 탈락업체가 유출된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평가에 이의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었는데도,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가 뒤바뀌었다. 업체가 뒤바뀐 배경에 부정·비리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4년새 3배 ↑

광주·전남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46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1400명)보다 3.3배 증가한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근거한 성범죄 신상

등록 대상자는 올 9월 기준 광주 2158명, 전남 24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2015년 904명, 2016년 1144명, 2017년 1509명, 2018년 1972명 이었으며 전남은 2015년 1090명, 2016년 1407명, 2017년 1738명, 2018년 2192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조직폭력 범죄 4년간 1271건 발생

최근 4년간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조직폭력 범죄가 127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 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는 1만 4581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주는 716건, 전남은 455건으로 집계됐다.

조직폭력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가

7438건, 사행성 불법 영업 1132건, 불법 및 변태영업 188건, 마약류 불법 유통 등 322건, 인신·성매매 172건, 탈세 및 사채업 142건 등이었다.

사행성 불법영업은 2015년 92건, 2016년 268건, 2017년 226건, 2018년 317건, 올 8월 기준 229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조폭들의 활동무대가 불법계 입장 등으로 변화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천시 경찰관 승진 채 발견

지난 30일 새벽 0시 45분께 순천시 한 주택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승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 가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독감 예방 백신 맞으세요.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예방접종 담당 직원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시즌을 앞두고 예방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음주운전 추돌사고 4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30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집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B(25)씨 차량 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 소수치인 0.103%로 측정됐으며,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후진을 하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도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비 들여 민간구조 받으라고?"...완도해경 오락가락 기준 '분통'

○...본격적인 낚시 시즌을 맞아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해양경찰의 오락가락한 어선 구조 기준을 놓고 어민들의 불만이 폭증.

○...지난 30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40분께 완도군 소장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t·승선원 13명)가 폐그물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 경비정이 출동, 해당 갓살항까지 예인조치를 해 줬다는 것.

○...해경은 앞서 지난 29일 새벽 0시 10분께에도 완도를 앞바다에서 어선 스크루에 그물이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인명이 아닌 재산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그물 제거 등 구조 업무를 민간잠수사에게 대신 하도록 했다가, 민간잠수사가 사랑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

○...이같은 '제 멋대로식' 구조 방식에 어민들은 "도대체 해경이 구분하는 '인명'과 '재산' 구조의 기준이 무엇인데, 사고 때 사비까지 들여가며 민간 구조를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는데,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직접 구조 여부는 현장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간잠수사도 먹고 살아야 하는 탓에 긴박하지 않으면 민간에 구조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해명.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